
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
-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 완화 -

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한기정, 이하 ‘공정위’)는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(이하 ‘생협법’)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.

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은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(소규모 기초지자체)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.

① 소규모 기초지자체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 완화

현재 수도권에 의료기관의 54%가 설립되어 있고, 의료인력의 51%가 종사하는 등(‘24년 말 기준)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. 이에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경우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,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, 총출자금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.

② 소규모 기초지자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 완화

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 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이상,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조합원 300명 이상, 총출자금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.

※ 생협법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료생협이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되, 설립인가 기준을 추가적으로 충족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

공정위는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“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 등을 완화함으로써 해당지역 내 보건·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,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,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.

※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

▶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·반대·수정 의견과 그 이유), ②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 우편: (30108)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(정부세종청사), 4층

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

* 팩스: 특수거래정책과(044-200-4467)

<붙임>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담당 부서	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배문성 (044-200-4430)
		담당자	사무관	김성하 (044-200-4433)

붙임1 의료생협의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추진

□ 추진 배경

○ 수도권에 의료기관의 54%가 설립되어 있고, 의료인력의 51%가 종사하는 (‘24년 말 기준) 등 지역 간 의료격차가 큰 실정

○ 지역 간 의료격차의 해소를 위해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* 인가 기준 등 완화 추진

* 조합원들에게 보건·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 중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(비영리법인)

□ 주요 내용

○ 인구 10만 명 이하 시 또는 군에 대해서는 ①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과 ②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완화

<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>

구분	요건	현행	개정안
의료생협 설립	설립동의자 최소인원	500명 이상	500명 이상 (인구 10만명 이하 시 또는 군은 300명 이상)
	총출자금액	1억원 이상	1억원 이상 (인구 10만명 이하 시 또는 군은 5천만원 이상)
	1인당 출자금액	5만원 이상	5만원 이상(현행 유지)
의료기관 추가개설	조합원 최소인원	500명 이상	500명 이상 (인구 10만명 이하 시 또는 군은 300명 이상)
	총출자금액	1억원 이상	1억원 이상 (인구 10만명 이하 시 또는 군은 5천만원 이상)

□ 기대 효과

○ 소규모 기초지자체에서의 의료생협 진입장벽을 완화하여, 해당 지역의 보건·의료서비스 공급 확대 및 경쟁 활성화에 기여

붙임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조합의 설립인가 기준) ① (생략)	제4조(조합의 설립인가 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5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·의료사업을 하는 조합(이하 “보건·의료조합”이라 한다)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500명 이상일 것 <단서 신설>	1. ----- -----, 다만, 시(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)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300명 이상으로 한다.
2.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<단서 신설>	2. ----- -----, 다만, 시(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)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.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10조의2(보건·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) ① 법 제4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	제10조의2(보건·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) ① ---- -----

기관 추가 개설인가(이하 “추가
개설인가”라 한다)의 기준은 다음
각 호와 같다. 다만, 해당 보건·
의료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진
료과목과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
의 진료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제1
호는 제외한다.

1.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 하나
마다 조합원이 500명 이상 증가
할 것 <단서 신설>

2.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 하나
마다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
증가할 것 <단서 신설>

② (생략)

1. -----

-----.

-----.
1. -----

---. 다만, 시(인구 10만명 이하
인 경우로 한정한다) 또는 군에
개설되는 경우에는 300명 이상
으로 한다.

2. -----

-----.
-----. 다만, 시(인구 10만명
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) 또는
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5천만
원 이상으로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